

북한의 집중적인 대남 대화공세 배경

한 기 범 (북한연구센터 객원연구위원)

Online Series CO 11-06

북한은 지난 1월 한 달 동안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형태의 대남 대화공세를 펴왔다. 당 통일전선부를 제외하고 조평통, 아태위, 인민무력부 등을 동원하여 당국회담을 비롯해 적십자,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회담은 물론 군사회담과 국회 간의 접촉까지 제의해왔다. 이와 함께 거의 매일 같이 북한 선전매체를 동원하여 자신들의 대화제의를 “난국을 타개하는 획기적 조치”라면서 우리 정부에 ‘무조건, 조속한 화답’을 촉구해 왔다.

〈2011년 1월 중 북한의 대남 대화촉구 과정〉

제의방식	주요 제의내용
1.1 신년공동사설	○ 남북 간에 “대화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시켜 나가야한다” 주장
1.5 정부, 정당, 단체 연합 성명	○ 4개항의 “중대제안” 발표 ①남측 당국, 정당, 단체들과의 폭넓은 대화 제의, ②북과 손잡으려는 그 누구와도 만날 용의, ③긴장완화와 평화, 화해와 단합, 협력사업 등 모든 문제 협의 가능, ④상호 비방중상 및 자극행위 중단 ○ 특히 “당국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
1.8 조평통 대변인 담화	○ 당국회담을 비롯하여 적십자, 금강산관광, 개성공업지구 회담재개 제의 ○ 판문점남북연락채널 재개, 남북경협협회사무소 동결해제 통보 ○ “우리의 대화제안에는 아무런 조건부도 없으며 그 진의를 의심할 것도 없다”고 주장
1.10 북 아태위, 적십자사, 경협 사무소 통지문	○ 당국회담 실무접촉, 적십자회담 일정·장소 제시 ○ 판문점 연락채널 재개(1.12), 경협사무소 정상운영 통지
1.20 인민무력부장 명의 공개서한	○ 우리 국방장관에게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할 데 대하여”를 의제로 하는 ‘남북고위급군사회담’과 이를 위한 예비회담 개최 제의
1.28 조국전선 호소문	○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형식으로 당국대화를 촉구하면서, 최고인민회의와 우리 국회사이의 의원 접촉도 제기
1.29 북 군사당국 통지문	○ 우리의 2월 11일 군사 실무회담 역제외에 대해 회담날짜를 2월11일로 앞당기자고 요구
1.31 북 아태위 통지문	○ 통일부에 “대화의 장애물들이 모두 제거”되었다면서 남북대화들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

북한의 이와 같은 대화공세는 첫째, 남북 당국 간의 대화 재개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과거처럼 남북 제 정당, 단체와의 “폭 넓은 대화”를 거론하거나, 의회차원의 접촉을 제기하면서도 당국 대화 재개에 비중을 두고 있다. 심지어 1월 31일자로 북한 아태평화위원회가 통일부에 보낸 통지문은 “우리(북) 군대의 대범한 고위급군사회담제의로 북남대화의 장애물이 모두 제거”되었다면서 “이제는 당국이 마주 앉아 대화할 때”라고 하여, 군사회담마저도 통일부와의 당국회담을 위한 방편으로 간주하는 뉘앙스를 전달해 오고 있다.

둘째, 대화의 ‘진정성’을 강조하면서 애원에 가깝게 우리에게 호응을 재촉하는 점이다. 남북 간에 대결이 지속되면 “핵 참화”(1.1)나 “무력충돌”(1.5) 운운하며 협박도 하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들의 “대화제안에는 아무런 조건부도 없으며 그 진의를 의심할 것도 없다”(1.8)며 애원조로 흐르고 있다. 회담 의제도 “쌍방이 관심하는 모든 문제”(1.31)를 협의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산가족 상봉 등 우리의 관심의제를 예로 들고 있다. 물론 북핵문제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으로 산생된 문제”(1.26 외무성 대변인 담화)라서 미·북 대화가 아닌 남북대화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로 비껴갔다.

셋째,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북한이 주도하고 있음을 부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전쟁위기가 그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일시 수습”되었다면서 대화제의를 “획기적인 중대결단, 애국애족의 대응단”(1.28)이라면서, 우리뿐 아니라 유관국들도 “대화의 기회를 틀어쥐는 용단”을 내리라고 주장(1.26 외무성)하였다. 특히 여기에는 김정일의 ‘결단’이 작용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신화통신은 북한의 대남 대화 촉구가 “충동 하에 추진된 것이 아니라 영도자의 고민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논평하였고, 조선신보도 신년공동사설과 ‘연합성명’에 있는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가 통일과 번영의 연대로 될 것”이라는 구절은 “영도자의 구상과 의지를 집약한 호소”(1.26)라고 해석하였다. 실제로 김정일의 ‘대남 대화 공세’ 지시가 없었다면 북한의 집요한 대화요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북한이 이처럼 남북대화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이에 대한 우리 국내 전문가들의 견해는 북한의 경제지원 확보 목적, 우리 정부 대북정책 흔들기, 국제사회에 명분 축적용 등을 거론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로 부터 쌀, 비료, 외화 확보가 절실해서 일수 있고, 짐짓 대화 시늉으로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의 근본 원인을 우리 정부에 돌리면서 2012년 한국의 총선, 대선을 틈타 대북 강경정책을 허물려는 통전차원의 전술일 수 있으며, 미국에 접근하여 국제적 제재 국면을 해소하고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주어 정치·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려는 수순일 수도 있다.

북한의 당면한 내부 사정에서 그 답이 있을 것이다. 북한이 일련의 정책을 선택하는 과정을 보면 ‘주체’를 고집하던 정권의 특성으로 내부 필요에 의해 외부 환경을 돌파하려 하고, 개인독재 정권의 안정을 최우선하여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한다. 북한의 집중적인 대남 대화공세는 “2012년 정치축제를 성대하게 치르기 위한 돈과 시간벌기”에 목적이 있다고 본다. 북한 지도부는 지난해 말쯤 내년 정치행사의 원만한 준비를 위해 대남 유화 국면 조성을 수단으로 선택했고, 각급 조직은 현재 그 지시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 당국 대화가 열린다면 대화 진의를 숨기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2012년은 '3대 수령들을 위한 잔치'가 집중되어 있는 해이다. 북한은 연초부터 "김일성 조선 100년사를 총화(결산)"하자면서 2012년에 '죽은 수령' 생일 100돌(4.15)을 "최상최대의 명절, 인류사적 대경사"로 맞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 2월 16일에는 김정일 생일 70돌, 4월 25일에는 창군절(創軍節, 북한은 1932년 이른바 '조선인민혁명군' 결성일을 창군절로 소급) 80돌을 맞게 되어 북한 주민들은 '현존 지도자'의 선군통치를 축하해 주어야 한다. 여력이 남아있다면 내년 가을에는 '미래 지도자'를 위한 축제를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 당 창건절(10.10) 무렵에 '김일성 민족 100년사 총화'를 명분으로 제7차 당 대회를 개최하여 김정은에게 당 2인자 자리를 내 줄 수 있다. 이 같은 정치행사의 서막을 올해 연말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20돌(12.24)에 최고사령관직을 김정은에게 넘겨주는 행사로서 시작할 수도 있다. 북한은 2012년에 '3대 수령복'을 자축하기 위해서 화려한 불꽃놀이, 성대한 경축 연회,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새로운 집단체조 등 잇달아 '축제성' 정치행사를 치러야 한다. 내년을 '최상최대의 명절'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권력 세습을 지지해준 간부들에게 번듯한 선물을 주어야 하고, 주민들에게도 그 어느 해 보다 넉넉한 '배급'을 주어야 할 것이다.

북한 당국이 내년의 '잔치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는 올해 그들의 경제선동에 답이 있다. 올해 풀 돈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열심히 모아 내년에 푸는 것이다. 주민들에게 올해는 허리띠를 최대한 졸라매게 하는 대신 내년에는 '이밥(쌀밥)에 고깃국' 맛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일종의 단기적 처방이다. 북한 당국은 내년에는 기필코 '강성대국의 문패'를 매달 것이니 올해에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진군'에 나서 줄 것을 주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만든 노래인 '승리의 노래'를 다시 부르며,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올해에도 10여 년 전처럼 "개미가 뼈다귀를 갉아먹는" 방식의 주민 노력 총동원이 재연될 것이다.

북한의 대화공세 이면에는 이처럼 올해 주민 노력을 총동원하고 내년에 치를 정치행사를 준비해야 하는 내부 사정과 연관이 있다. 남북대화, 주변에 '평화 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내부문제에 집중할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조건에서 북한이 군사적 동원태세를 지속 유지하는 데 비용뿐만 아니라, 군인들과 젊은 근로자들을 생산현장에 집중적으로 동원하기 어려운데 따른 기회비용이 들게 된다. 남북 간의 긴장고조로 인한 후유증은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과 같이 규모가 작은 통제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주민들의 물자 은닉이나 사재기로 인하여 품귀현상이 생기고 당국이 물자를 비축하기가 어려워진다. 연평도 도발 이후 북한에서 쌀값과 외화가치가 폭등한 것도 전쟁에 대한 우려가 입소문으로 퍼져 사재기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은 남북대화의 대가로 우리로부터 내년도 정치행사에 필요한 물자와 재원을 확보하면 더욱 바람직하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다. 북한은 "남과 북이 다 같이 대화 덕을 보자"고 주장하였다. 위협과 도발을 자제하겠으니 경제지원을 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외부지원이 격감한지 오래며, 비축물자도 상당부분 소진되어 자력으로 민생향상은 물론 '수령' 생일에 넉넉한 잔치상도 차릴 수 없을 만큼 경제가 악화되었을 것이다.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로 부터의 구걸은 잘 통하지 않을뿐더러 그 진행도 더딜 것이나, 한국과는 대화과정에서 위협 반, 구걸 반으로 정치적 흥정을 잘 하면 조속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북한은 우리에게 “무조건, 조속한 대화 재개” 주장을 통해 “무조건, 조속한 지원 재개”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에 북한이 자행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북한 지도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무모하고 돌출적으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북한이 남북대화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도발을 자행한 것은 북한 지도부로서는 남북관계 관리보다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은의 ‘대담성’을 과시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김정은의 ‘대담한 군 지휘능력’을 군 간부들에게 각인시켜 얽잡아 보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었고, ‘남한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무모한 생각도 작용했을 것이다. 북한의 대내외 정책의 무모함과 돌출성은 김정일로부터 김정은에게로 권력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 만큼 우리 정부로서는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부담이 커짐을 의미하며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앞으로 북한은 내부사정이 여의치 않고 주변 환경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뀌지 않을 경우 또 다시 돌출행동을 범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절박한 입장에 있어 우리 도움이 절실하다면, 대남정책도 상응하게 바뀌어야 한다. 도발 상습병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북한이 분명하게 대화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방법은 “강성대국 문패”에 앞서 ‘개혁·개방 문패’를 다는 데 있다. 2012년은 북한이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도한지 10년이 된다. 우리는 그때 잠시나마 북한에서 희망을 보았었다.